

칼럼



김윤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한미정상회담과 남북문제의 해결책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단독회담 및 소인수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회담을 37분 한 데 이어 소인수(小人數)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 등 총 171분 동안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에 44조를 투자한 삼성, 현대 자동차, SK, LG 대표자를 일컫는 '갑사합니다(생큐)'를 세 번이나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하여 대북문제 전문가인 성감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바이든 대통령은 풍부한 경험으로 감사도 확실하게 표시하고 남북문제를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는 조치를 확실하게 취했다.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스가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문재인 대

통령을 초대했다.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백신 지원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55만 한국군에게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더나와 노바백스를 국내 위탁 생산하기로 결정했고 그 중에 상당 물량을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한 물량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가급적 조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국내에 조기에 공급하는 합의를 했다. 삼성 등 우리 기업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을 하겠다고 하여 백신동맹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정상회담이 끝난지 7일만에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주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한미 동맹은 70여 년 전 전쟁터에서 형성됐고, 지난주 우리는 이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

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떠나서 평화동맹으로 진전하고 있다.

미사일 지집을 42년 만에 해제하여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우주 산업 개발에 큰 걸림돌을 제거하여 위성발사, 한국형 GPS, 무인기 개발 등 여러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대만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안보공동체에서 경제 공동체로 발전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친중국·친북·반미정권으로 인식해온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친중(親中) 정권이 갑자기 친미(親美) 정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역사적으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일본과의 무역 총액과 미국과의 무역 총액을 합한 것 보다 중국과의 무역 총액이 더 많다. 그렇다고 협력

인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뭉개야 뭉개 수 없는 관계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군사적으로는 미국,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시해야하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이나 균형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일일 것인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과 정상회담도 해야 하는데, 친중·반미라고 비난할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한민족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한민족이 개척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은 한반도문제에 이익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제3자요 협력자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분명히 남과 북이다.

한반도 문제, 남북문제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무조건 만나서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은 그만하고, 당대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공산주의 중추국, 적성국가 러시아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을 제우도로 초대하여 30억불 차관을 제공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행되지 않은 공동선언, 공동성명은 차고 넘친다. 나는 그 차관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상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외교부와 통일부에 확인했다.

기고

스토킹! 잘못된 욕망이 만든 범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죄를 누우치지 않는 피의자와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지독한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시작해 점점 협박,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약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교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다

이런 와중에 스토킹 범죄는 해가 넘어갈수록 증가하였고, 최근에 발생한 "세모녀 살인사건"처럼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21년 3월 24일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었던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그동안 잘못된 사람을 사랑이라고 믿는 가해자를 지금부터라도 엄하게 처벌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박은유/순천경찰서경무계경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행중’ 스마트폰 이어폰 사용해선 안 돼

도로를 걷다보면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이까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스마트폰은 휴대도 간편하고 음

악부터 음성감각까지 기능도 다양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과 영화 감상 등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보행 중일 때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이어폰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사고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된다.

만약 이어폰을 착용하고 보행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주위에 대한 청각이 둔해지고 집중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마주 오는 사람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부딪쳐 안전 사고를 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로 도로를 횡단중이거나 횡

단보도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다니다가 자동차 경적소리나 위험 신호를 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길거리를 보행 중일 때에는 가급적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으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 음량을 줄이거나 한쪽만 이어폰 착용하여든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 안전 사고 예방에 좋을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내내파출소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